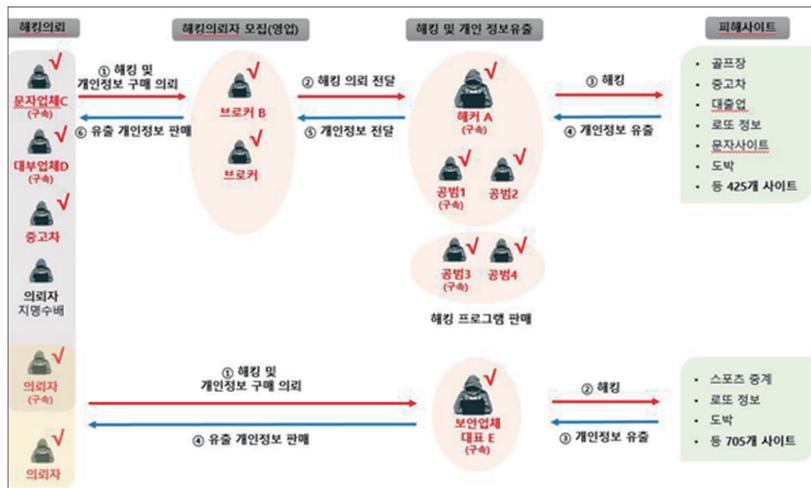


개인정보 850만건 빼낸 해커 일당 검거

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 취약 누리집 노력 해커·알선책·판매책 등 나눠 점 조직 형태로 범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킹을 의뢰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누리집(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정보 850만여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 A(31)씨, 알선책 B(26)씨, 영업 목적으로 해킹을 의뢰한 C(30)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판매 중개책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SNS 대화 기능을 활용해 해킹 의뢰를 주고 받았으며,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졸업·골프장·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1125곳에서 고객정보 850만여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커 A씨는 자동 해킹 프로그램, 휴대전화 저장 정보 원격 전송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해커, 유출 정보 공급책, 알선책, 판매책 등 점 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 A씨는 알선책이 의뢰하면 자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의뢰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경찰은 해킹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도 인지,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업자와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유포한 대부업자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의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2만여개를 압수·분석했으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 4억5000여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해킹 피해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보호·추가 피해 예방 조치에도 힘썼다.

전남경찰청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가을맞이 대청소' 속삭데이 진행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26일 가을맞이 대청소 일환으로 북구 누문동 공영주차장 환경정화 활동 속삭데이에 나섰다.



신안소방, 청렴 세대공감 콘테스트 '우수상'

신안소방서는 지난달 25일 "2023년 청렴 세대공감 영상 및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구례소방, 구례병원 화재안전 컨설팅 실시

구례소방서는 구례병원에 방문해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 동부소방서, 10월 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전통시장 및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서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과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경찰,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활동 전개

장흥경찰서는 10월 26일 중국출신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수경찰, 자율방범연합대 발대식 개최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자율방범연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뇨 앓던 수용자 사망...인권위 "구치소 의료 개선해야"

만성질환 수용자, 입소 후 사망해

만성질환을 앓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의료거실·치료거실 기능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것 ▲의무관의 책임치료 보장 ▲인적·물적시설 확충 ▲만성질환 등에 관한 특별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구치소장에게는 ▲의무관과 간호인력 보충 ▲의료시설 목적에 적합한 치료시설 운영 ▲정자세 유지 요구 등 업무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경화·당뇨·고혈압을 앓고 있던 수용자 B씨는 입소 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이후 화장실에서 혼절해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구치소는 이후에도 B씨의 질병을 치료·관리하지 않았고, B씨는 건강이 악화돼 협정행정지를 받은 당일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복합 만성질환자인 고인의 치료요청을 무시하고 질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는 B씨가 입소 전부터 간경화 등 병력이 있어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해 경과를 관찰했고, 수시 혈당 체크와 진료로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구치소 치료시설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치료시설 응급벨이 의무관실이 아닌 상황실로 연결되는 등

환자 특성별로 그에 합당한 응급 처치 등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병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만성 합병증 환자 B씨를 평소 정자세로 앉아 있게 해 좌측 복사뼈에 염증이 생기게 했다는 측면에서 B씨의 의료 접근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권 등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에 A구치소장은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 순회 진료 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의무관 인력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3년여간 이를 방치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치소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 사망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치소의 치료시설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 벼 수확 체험

있다.

1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민속촌 앞 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 박경희새마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벼 수확 체험을 하고

나흘만에 또...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적발

'바다의 지뢰' 범장망 사용

제주 해상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무허가 조업을 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어업의 허가)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360t·승선원 18명)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9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A호를 발견하고 특수기동대를 급파,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중국에서 출항해 적발될 때까지 조기 등 1620kg가량의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올해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고 최근에는 무인 헬기와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도 한중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불법 어구가 발견됐다. '바다의 지뢰', '씩쓸이 어구'라 불리는 범장망의 경우, 치어까지 포획되는 데다 유실될 경우에는 어장을 황폐화시킨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선 범장망 어구 조업이 금지됐다.

뉴스

여수=기동채본부